

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의 개편 및 경제, 교육정책 등 핵심적인 국가정책들이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따라 기본 틀까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큰 틀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기존의 국가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태안기업도시,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장항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보령신항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추진 또는 예정되고 있는 충남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책사업은 국가적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차원에선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이다. 생산 활동과 주민의 실생활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치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오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된 추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면 수많은 지역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충남이 2007년 한해 거둔 눈부신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성과는 도정의 탁월한 리더십과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이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추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국책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일부 정치적 이견이 있었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자는 행정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확인하여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 밖에 태안기업도시와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장항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행정도시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국책사업이므로 지속적 추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국책사업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세종시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국제과학도시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하였다. 다른 국책사업의 추진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생활의 개선에 직결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보령신항 건설도 조속한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충청권 국제과학 기술벨트 구축, 금강벚길 복원, 충남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세계 군 평화페스티벌 개최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충남지역의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는 지역의 미래발전은 물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중도일보 1월 14일자 7면